

최근 영국경제 호조의 원인과 정책 시사점

김 홍 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김 군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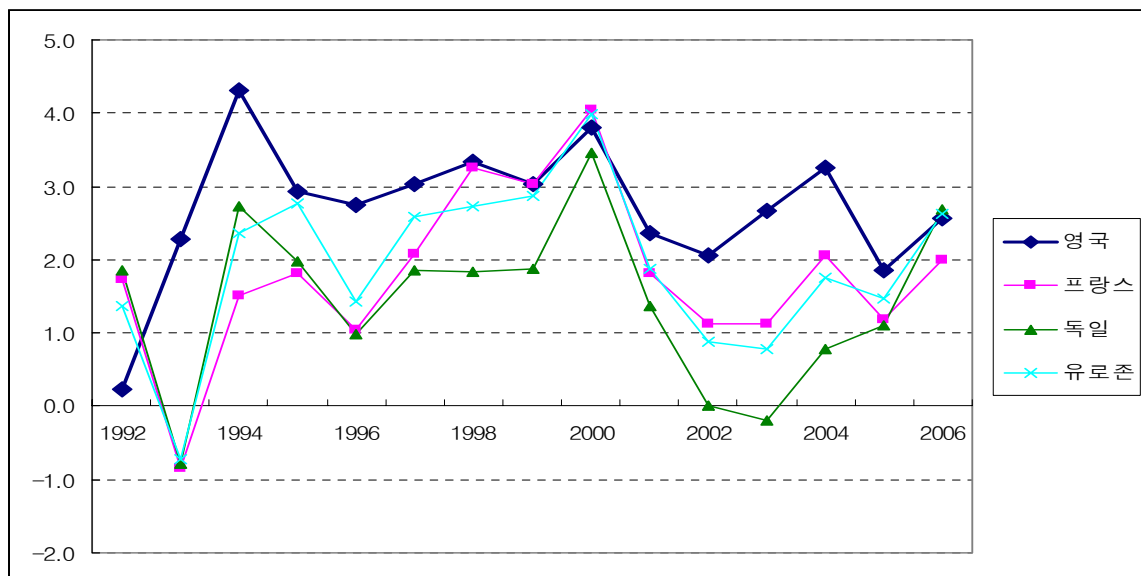
- 1993년 이래 영국경제는 고성장-저실업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호조의 원인으로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기업환경의 개선을 들 수 있음.
 - 1990년 이후 영국의 금융보험업, 사업비즈니스, 우편·통신업 등의 지식집약적 서비스업 부문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업 환경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음.
-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전통적 부문의 사회안전망을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고용불안 및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유지하였음.
- 한국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사회구성원의 후생 증진을 위해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성장, 노동시장을 포함한 기업환경의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다만 사회안전망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전통적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중심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친화적 사회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사회경제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1. 최근 영국경제의 호조

- 영국경제는 1993년 이래로 최근까지 ‘고성장-저실업-안정된 물가’가 선순환을 이루는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1990년대 초 영국경제는 버블경제의 후유증 및 파운드화에 대한 공격적 투기 등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나 1993년 이후로 전후(戰後) 가장 긴 경제적 호황기를 맞고 있음.
- 노동당 집권기인 1997~2005년 영국경제는 연평균 2.8% 성장을 보여 같은 기간 유로존(Euro-zone)의 연평균 성장률 2.1%를 능가하는 호황을 누림.
 - 이는 유럽대륙의 대표적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1.3%와 2.2%보다 높은 성과이며, 특히 독일 경제가 -0.2% 성장으로 침체를 겪은 2003년에도 영국경제는 2.7%라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

그림 1. 영국과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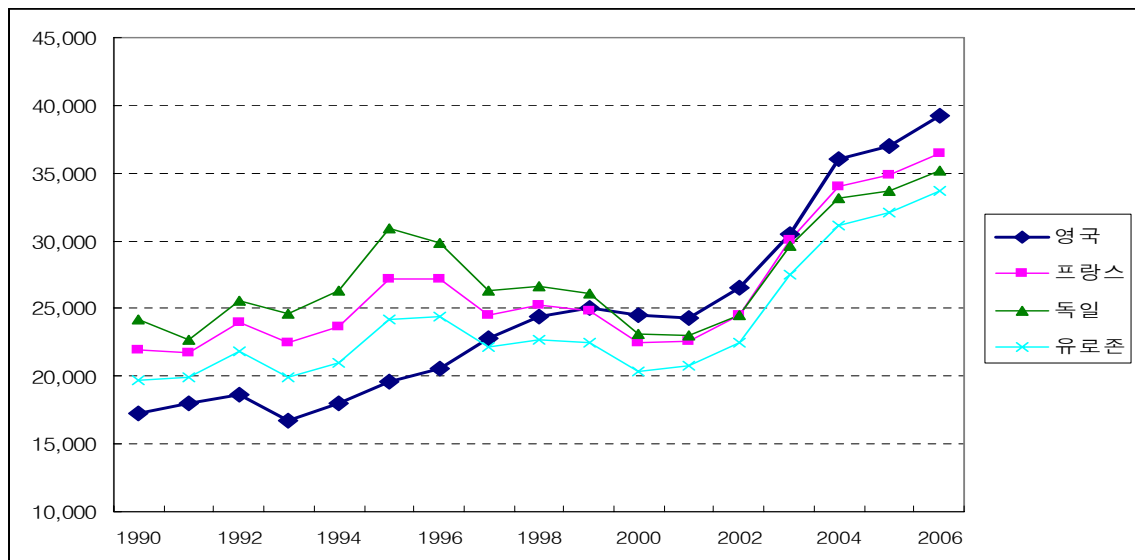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한 1997년 독일과 프랑스보다 낮았던 1인당 GDP도 1999~2000년에는 더 상승함.
 - 1997년 영국의 1인당 GDP는 22,805달러로 독일과 프랑스의 26,367달러와 24,50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5년에는 36,957달러로 상승, 독일(33,713달러)과 프랑스(34,865달러)를 능가함.

그림 2. 영국과 EU 주요국의 1인당 GDP 추이 비교

(단위: U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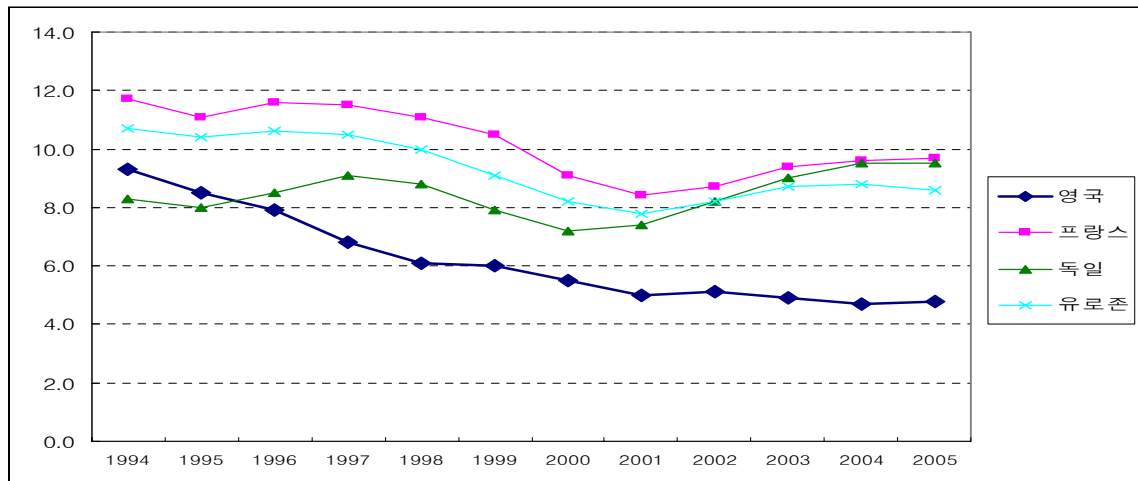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Global Insight

- 1994년 9.3%이던 영국의 실업률도 계속된 경기확장에 따른 고용증대로 2005년 유로존 실업률 8.6%의 절반수준 정도인 4.8%까지 하락함.
- 반면 1994년 8.3%이던 독일의 실업률은 2005년 9.5%로 오히려 상승하였고, 프랑스도 같은 기간 11.7%에서 9.7%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영국의 실업률에 비하여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임.
- 영국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까지 달성, 양호한 거시경제 성적을 기록함.
- 영국 물가는 1993~96년에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1997~2004년 1%대의 안정세를 이루다가 다시 2005년에는 2.0%로 다소 상승함.
- 1997~2005년 영국의 평균물가상승률은 1.4%로 유로존의 1.9%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영국과 EU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 영국경제 호조 요인 분석

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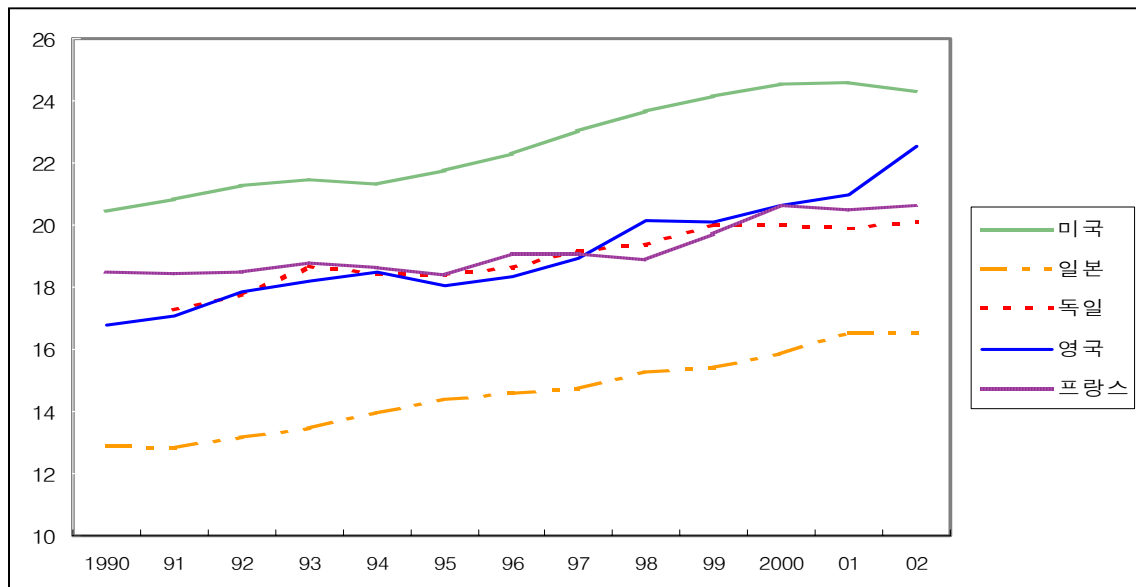
- OECD는 영국경제가 최근 10여 년 이상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¹⁾
 - 영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생산에서 제조업부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그 하락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02년 현재 총GDP 대비 영국의 제조업 비중은 15.2%로 이는 독일(22.3%), 프랑스(17.6%)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17.2%)보다 낮은 수준임.
 - 영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성장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금융·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 등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통신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2002년 영국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74.1%로 독일(70.0%), 프랑스(72.9%)뿐만 아니라 OECD 평균(71.%)보다 높음.
- 특히 영국은 서비스부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 부문이 기타 선진 경쟁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 OECD(2005),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Kingdom*.

- 그림 4에서 보듯이 1990년 이후 영국의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크게 증가함.
- 1991년에는 프랑스(18.5%)와 독일(17.3%)보다 낮은 17.1%였으나 1998년에 이들 두 국가를 추월하여 2002년 현재 22.5%를 기록, 프랑스 20.6%, 독일 20.1%를 능가하고 있음.

그림 4. 주요국들의 '지식집약적 서비스업' 비중 추이

(단위: %, GDP 대비)



주: 여기서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 은 금융·보험업, 비즈니스 서비스(부동산업 제외), 우편·통신업 등을 말함.
 자료: OECD(2005),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영국은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 대신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있음.

-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철강, 섬유·의류, 조선 등의 부문은 다른 후발국 및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들에게 그 지위를 양보하는 한편, 자동차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부문은 FDI를 통해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영국 제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²⁾

- 반면 영국은 영국 산업 최대의 원동력인 금융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집중하고 있음.

- 런던은 유럽 제1의 금융시장으로서 외환거래, 주식, 역외금융, 회사채, 파생상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보험시장, 각종 원자재시장, 선박중개 시장임.

2) 그러나 영국의 전기·광학 장비, 합성섬유, 화학품(특히 의약품) 등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2005년 현재 세계금융센터 중 가장 많은 450개의 외국계 은행들이 런던에 입주해 있음.

- 뛰어난 금융환경은 법률, 컨설팅, 광고 등과 같은 비즈니스서비스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도 이 부문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우수한 기업환경

- 현재 영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영국경제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 EIU가 2006년 평가한 사업환경 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s)를 살펴보면, 영국의 2001~05년 순위는 82개 국가들 가운데 6위, 2006~10년 예상순위는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우수함.³⁾
 - 영국은 북구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11위)뿐만 아니라 대륙형 모델의 주요국인 독일(14위)과 프랑스(18위)를 앞서고 있음.⁴⁾
- 특히 EIU가 평가한 사업환경 순위 항목 중에서 노동력의 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0점 만점에 7.9를 기록, 82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에 위치함.
 - 영국은 노동시장 이외의 항목 중 ‘금융’ 부문과 ‘FDI 정책’에서 1위, ‘민간기업 및 경쟁정책’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부문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음.
 - 한편 덴마크 및 스웨덴, 독일과 프랑스 모두 노동시장부문에서는 영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3) EIU(2006),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0: Boom or Backlash?*

4) 사업환경 1위는 덴마크임

표 1. 국가별 사업환경 순위

	2001~05년 점수	2001~05년 순위	2006~10년 점수	2006~10년 순위
덴마크	8.64	1	8.77	1
미 국	8.62	3	8.68	5
영 국	8.56	6	8.63	7
스웨덴	8.29	11	8.46	11
독 일	7.98	14	8.36	14
프랑스	7.81	18	8.07	18
한 국	7.10	25	7.46	26
일 본	7.00	26	7.45	27
중 국	5.58	56	6.36	51

주: 82개 국가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EIU(2006),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0: Boom or Backlash?*

표 2. 기업환경 순위의 부문별 평가 비교(2001~05년)

	영 국		독 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한 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총점 및 순위	8.6	6	7.9	14	7.8	18	8.6	1	8.3	11	7.1	25
1. 정치환경	8.1	14	8.8	9	8.1	14	9.5	2	9.5	2	7.2	22
2. 거시환경	8.9	7	8.0	25	8.0	25	9.2	1	9.2	1	8.6	10
3. 시장기회	7.6	7	7.1	11	7.2	10	6.0	40	6.3	27	7.4	8
4. 민간기업정책 및 경쟁정책	9.3	2	8.5	10	8.0	17	9.3	2	8.8	7	6.5	29
5. FDI 정책	9.6	1	8.7	9	8.2	17	9.1	5	9.1	5	6.9	40
6. 무역 및 외환거래	8.7	13	8.7	13	8.2	26	9.1	9	8.7	13	7.8	31
7. 세금	7.6	15	5.1	60	5.1	65	7.1	19	6.0	33	7.0	20
8. 금융	10.0	1	8.9	13	9.6	5	10.0	1	8.9	13	5.9	45
9. 노동시장	7.9	4	7.0	23	6.9	27	7.7	8	7.2	14	6.0	48
10. 인프라	8.2	18	9.0	9	8.9	11	9.6	1	9.4	3	7.8	22

주: 82개 국가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EIU(2006),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0: Boom or Backlash?*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관련된 OECD의 고용보호규제 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icators, EPL Indicators)⁵⁾를 통해 본 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도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5) EPL 지수는 고용보호규제의 정도에 따라 0~6까지 분류됨. 즉 '0'이 고용보호규제의 정도가 가장 약하고 '6'이 가장 강함.

- 영국은 상용근로 및 임시근로 계약의 EPL 지수 모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호규제가 가장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국가별 EPL 지수 비교

	상용직 고용 (Regular employment)			임시직 고용 (Temporary employment)			단체정리해고 (Collective dismissals)		전체 EPL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3년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3년	1990년대 말	2003년	1980년대 말	1990년대 말	2003년
덴마크	1.5	1.5	1.5	3.1	1.4	1.4	3.9	3.9	2.3	1.4	1.4
스웨덴	2.9	2.9	2.9	4.1	1.6	1.6	4.5	4.5	3.5	2.2	2.2
프랑스	2.3	2.3	2.5	3.1	3.6	3.6	2.1	2.1	2.7	3.0	3.0
독 일	2.6	2.7	2.7	3.8	2.3	1.8	3.5	3.8	3.2	2.5	2.2
영 국	0.9	0.9	1.1	0.3	0.3	0.4	2.9	2.9	0.6	0.6	0.7
미 국	0.2	0.2	0.2	0.3	0.3	0.3	2.9	2.9	0.2	0.2	0.2
일 본	2.4	2.4	2.4	1.8	1.6	1.3	1.5	1.5	2.1	2.0	1.8
한 국	-	2.4	2.4	-	1.7	1.7	1.9	1.9	-	2.0	2.0

자료: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

-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우수한 기업환경 조성 정책을 배경으로 영국은 EU 25개 회원국 중 최대 FDI 유치국의 지위를 갖고 있음.

- 중·동구 지역에 대한 FDI가 점차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도 2005년 영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2005년 스톡 기준으로 EU 회원국 중에서는 1위, 세계에서 2위의 FDI 실적을 보였음.

표 4. 국별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3년	2004년	2005년	1990년	2000년	2005년
	FDI 유입(flow)			FDI 스톡(stock)		
영 국	16,778	56,214	164,530	203,905	438,631	816,716
독 일	29,202	-15,113	32,663	111,231	271,611	502,790
프랑스	42,498	31,371	63,576	86,845	259,776	600,821
스페인	25,926	24,761	22,987	65,916	156,348	367,656
EU 25	253,728	213,726	421,899	768,160	2,179,706	4,499,128
	FDI 유입(flow) 비중*			FDI 스톡(stock) 비중*		
	2003년	2004년	2005년	1990년	2000년	2005년
영 국	6.6	26.3	39.0	26.5	20.1	18.2
독 일	11.5	-7.1	7.7	14.5	12.5	11.2
프랑스	16.7	14.7	15.1	11.3	11.9	13.4
스페인	10.2	11.6	5.4	8.6	7.2	8.2

주: * EU 25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ited Nations(2006), *World Investment Report*.

다. 합리적인 사회보장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의욕을 고취함.

- 1979년부터 1997년 사이의 보수당 정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촉진이나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사회부조 지출을 감소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였음.
- 1997년 집권하여 ‘제3의 길’을 천명한 노동당 정부는 ‘복지에서 노동으로(from welfare to work)’라는 슬로건하에, 실업자들이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함.
- 실업자에 대한 각종 소득지원을 줄이는 대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⁶⁾을 강화하여 복지혜택 수급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제고하여 고용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합리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함.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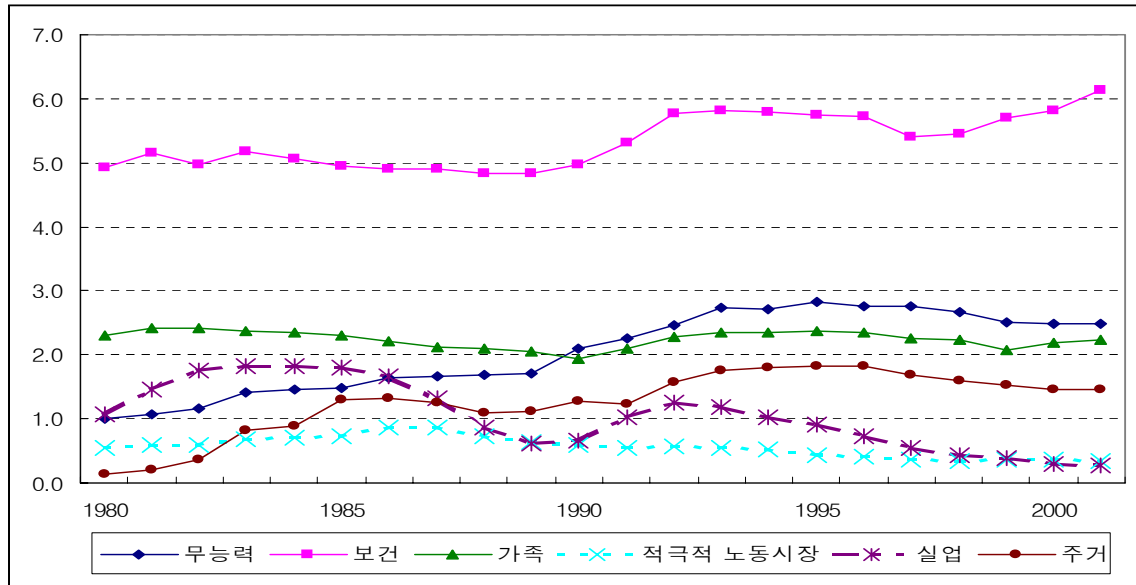
- 1980년대 초반 이후 보건, 주거, 무능력자 소득지원 등 노동복지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유지·확대되고 있음(그림 5 참고).
-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전 및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과 같은 노동복지에 대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축소됨. 실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실업급여의 규모도 축소되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호황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주로 보건분야의 확충에 투입하였으며 보건을 제외한 다른 복지부문의 GDP 대비 비중은 약간 감소하고 있음.

6) OECD는 노동시장정책을 크게 소극적 정책과 적극적 정책으로 나누고 있음. 소극적 정책은 실업보험 등 실업자에 대한 각종 소득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지원은 실업자가 빈곤에 빠질 위험을 줄여주지만, 소득지원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유인이 줄어들어 장기실업에 머물 위험이 높아짐.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공공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

7) David Card and Richard B. Freeman(2002), “What Have Two Decades of British Economic Reform Delivered?”

그림 5. 영국정부의 분야별 지출 추이

(단위: %, GDP 대비)



자료: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시장친화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부문별 사회정책의 조정을 통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조화를 꾀하고 있음.

-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용보호의 정도와 범위가 축소되면서⁸⁾ 기업들의 노동인력 고용 및 해고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환경을 개선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⁹⁾
- 또한 실업자에 대한 각종 소득지원을 축소하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근로유인제도 도입 등의 정책도 현재 영국의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일정부분(modest)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⁰⁾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로 인한 고용불안 및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GD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부문별 지출 비중을 조정하는 등 사회보장정책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8) Amanda Gosling and Thomas Lemieux(2001), "Labour Market Reforms and Changes in Wage Inequalit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Series.

9) OECD(2005), *Economic Survey: United Kingdom*.

10) Van Reenan's(2002)은 노동당 정부의 근로유인제도인 뉴딜(New Deal) 정책이 고용에 어느 정도(modest)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함. 즉 구직활동지원,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축소 등의 종합적인 정책은 약 17,000명의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형 국가들도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경제의 선순환적인 경제모형과 유사함.
- 다만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즉 영국은 사회안전망이 북구형 국가들보다는 약한 대신 노동시장은 더 유연함(표 3 및 그림 6 참고).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면에서는 영국이 상대적으로 다소 우수한 반면, 평등성 면에서는 북구형 국가들이 우수함.
- 영국 공공부문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구형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형 국가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럽 선진 EU 15개 회원국 및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GDP 대비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관대한 사회복지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은 대륙형 국가들은 형평성면에서는 북구형 국가들만큼 우수하지만 효율성면에서는 영국과 북구형 국가들보다 훨씬 떨어짐.

그림 6. 주요국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지출 추이

(단위: %,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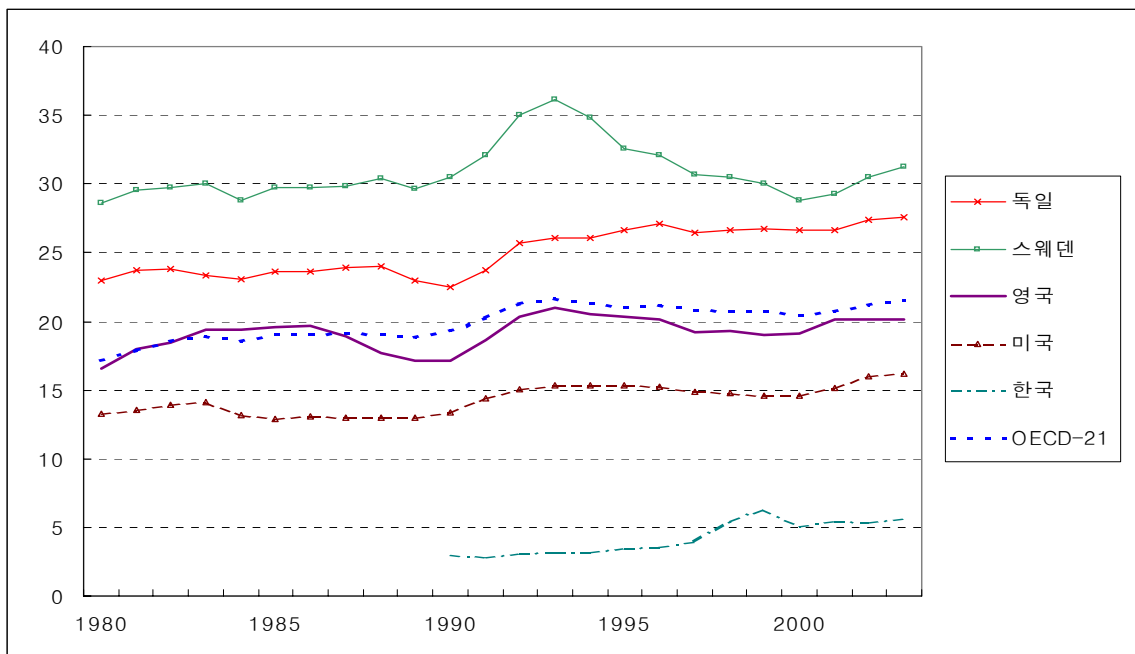
자료 : OECD (2006),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표 5. 각 경제모델별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

(단위: %)

	경제성장률 ¹⁾	실업률 ¹⁾	지니계수 ²⁾
영국	2.92	6.0	32.6
독일	1.39	8.4	27.7
프랑스	2.14	10.1	27.3
스웨덴	2.86	7.1	24.3
덴마크	1.96	5.2	22.5
OECD 평균	2.58	6.8	30.7

주: 1) 1995~2004년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치임.

2) 대부분 국가들은 2000년 기준이며, 독일 등은 2001년 기준임.

자료: OECD(2006), OECD Factbook 2006; Michael Foster and Marco Mira d'Ercole(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3. 시사점 및 결론

- 영국의 경제호황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성공함으로써 가능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정책과 노동정책간 조화가 돋보임.

-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정신을 반영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유연하고 우수한 노동환경을 갖추고 있음. 사회안전망의 혜택하에서 근로자들은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등의 위험을 감수함.

- 영국은 현대 선진국의 국가적 해결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간의 선순환적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국제경쟁의 심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왔으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증대되어왔음.¹¹⁾

- 영국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추진과 더불어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여 사업환경 개선 → 기업투자 활성화 → 고용증대 → 고성장 →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선순환의 유연안

11) EU차원에서도 1997년에 채택된 '유럽고용전략(Europe Employment Strategy: EES)'에서 유연안정성을 주요한 고용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2006년 10월에 발표된 EU집행위 고용사회총국의 '2006 유럽의 고용(Employment in Europe 2006)'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평생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유연안정성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음.

정성을 확보함.

-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투자 확대 및 FDI 유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고용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노동시장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IU가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조사대상국 82개 국가 중 25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는 48위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국 노동인력의 우수성을 고려한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양극화가 EIU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함.
- 현재 한국경제는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불안 및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안전망 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이 중요할 것임.
 -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 즉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혜택 수급을 위한 개인부담이 증대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부담 규모를 북구형 국가들만큼 인상하기 어렵고 개인부담이 높을수록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큼.
 -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중심적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국과 같은 합리적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사회경제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